

충남 여성의 좋은 일자리, 생협에서 찾아보자



이영희
전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실현가능한 목표일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가 꼭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청년세대들이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가족을 이루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늦게 까지 끊이질 않는 걸 상상해보면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난다.

낯익은 이름의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이 들려올 때면, 명절 이외에는 너무나 고요해서 적막한 겨울밤을 보낼 때면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겨울방학이면 아이들이 눈에서 얼음썰매를 타고, 연을 날리고, 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하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손주들에 게도 그런 겨울의 정취를 전해줄 수 있을지 걱

정이 되곤 한다. 꼭 혈육이 아니더라도 청년세대가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도와줄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반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필자로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따로 쉬는 날 없이 한해 농사에 매달려보지만 그해 냉해, 수해, 병충해로 인해 작황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철 농산물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값싼 외국농산물과도 경쟁해야 한다. 농사꾼이라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기가 폭락해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굳이 직장인에 비교한다면 감독하는 상사와 치고 올라오는 직장 후배가 없다는 점이 좋

을 뿐, 번듯한 직장인처럼 4대보험의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농사는 이토록 여러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농민이 책임져야 하는 ‘1인 사업자’의 영역이다. 이쯤이면 농촌 사회의 산업화가 청년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염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소비하던 20세기형 소비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농촌에도 새로운 가능성의 감돌고 있다. 생산비용, 유통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농민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자’와 함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문화이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협’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인 생협은 소비자가 3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을 이루고, 조합의 위원회를 통해 생산자(농민)과 조합원이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생협이 직접 생산자들을 찾아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추가 가격안정장치 등을 마련, 물품가격이 비싸질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하면서, 생산자에게 이 기금을 활용해 납품가격을 올려주는 방법도 실시한다. 일례로 한 생협은 도신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투자해 회생시킨 바 있다. 조합원들의 투자금은 후에 조합원들이 선택한대로 유기농 한우고기 혹은 현금으로 돌아갔다.

생활협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생략하고, 시장의 변동요소를 제거하면서 농민에게는 안정적 수익

과 농산품 품질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간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것이 곧 농민과 소비자와 상생을 이어지는 것이다.

생활협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자리 잡은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그 뿐이 일고 있다. 도시에서는 생협이 농산품 구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끼리 힘을 합쳐 아이들의 보육, 간병 까지 함께 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생협이 결성되면서 소비자들은 경쟁적이고 과시적 소비 성향에서 벗어나서 주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대신 뜻이 맞는 학부형들이 보육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친환경적이고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간식을 먹이는 것이다. 왜 우리 세대는 일찍이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이다.

생활협이 한때에 바람에 그치지 않고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서도 자리 잡길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특히 생협을 통해 농촌의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산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동안 여성 농민은 대개 배우자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는 보조적 노동력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농가의 핵심자산인 농지, 농가주택 등 부동산은 80% 이상 남성(남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토지 매매, 영농자금 대출 등 의사결정에 여성이 관여하지 않는 비율은 4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하지만 실상 여성 농민은 농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보육,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떠맡고 때로는 가족의 간병인 역할까지 해낸다. 여기에 부녀회, 생활개선회 활동 등 대외적인 여성단체 활동도 겸하며 농촌 공동체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지역 특산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향토 음식, 구전 민요, 전통 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은 농촌 여성들의 그러한 희생이 대를 이어온 결과물이다. 결국 농촌의 복지적 요소, 문화적 요소는 여성 농민의 힘의 의지되어 왔건만, 청년층의 빈자리가 눈에 띠는 요즘 여성 농민의 어깨는 더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

이 어깨의 짐을 덜어줄만 한 대안이 생협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맡아왔던 복지적 역할을 생협이 능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오히려 한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 지던 보육과 간병 등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시너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생협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끌어안고, 글로벌 인재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돋는 한편 그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자녀들이 원어민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고,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논 다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 역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다.

모든 보육 과정과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니 인건비는 따로 크게 들 것이 없고, 다만 식사에 필요한 재료들의 현물출자와 기타 운영비용의 출자가 필요할 것이다. 간병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복지생협의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이고, 공간활용에 여유가 있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보다 정서적 측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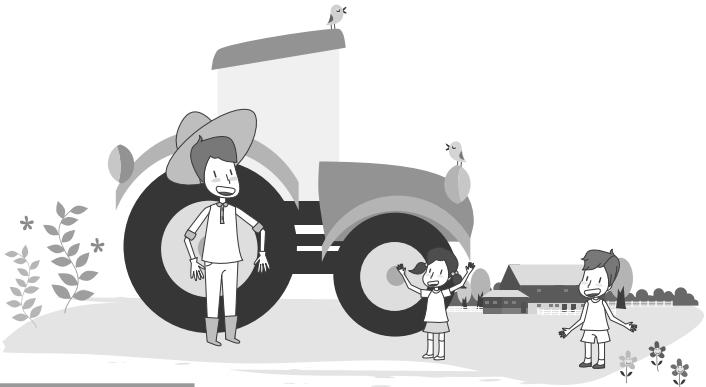
농민들에게 '조합'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것은 늘 '생산'과 가까운 단어일 뿐 '생활' 또는 '복지'와는 거리가 먼 단어였다. 물론 생협은 생산자들 측면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며, 앞으로 생협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담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쌓아온 농촌 여성들이 그러한 담론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4대 보험도 안되고, 수입은 불규칙할 수 있지만, 결혼 때문에 퇴직하지 않아도 되고, 60대도 청년처럼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생협을 통해 전인적인 육아와 양질의 간병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한 곳이 우리 농촌이라면 떠났던 청년들도, 사람냄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충남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김영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듣기에 따라서는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30조 원 가까운 돈을 3차례에 걸쳐 농업·농촌 투융자에 투입하였다.

한쪽에서는 ‘밀 빠진 독에 물 붙기’라고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농촌이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농업인이 이렇게라도 사는 것은 그래도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우리 농업에 시원한 물줄기를 뽑아줄 마중물로 활용되었는지 마실 물로 차각한 사람들의 갈증 해소용에 그쳤는지를 따

지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농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들고 농업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는 그 해답을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이야기한 다산 정약용의 3농 이념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다산은 35세에 황해도 곡산부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관리로서의 현장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제시하라는 정조의 교지에 응하여 ‘응지론농정조’를 옮린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에는 다른 산업만 못한 세 가지가 있는데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안하기로는 백공(百工)만 못하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농업을 권면(勸勉)하여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유명한 3농정책을 피력하였으니, 첫째는 편농(便農)으로 장차 편하게 농사짓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후농(厚農)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익이 있게 하려는 것이요, 셋째는 상농(上農)으로 농업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 그때나 20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된 농업의 고민은 매 한가지이고 그 해결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좀 덜 고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고, 농업이 우리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인정된다면 농사를 기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산이 이야기한 해법인 3농정책(편농, 후농, 상농)이 생력화기술, 스마트농업, 6차산업화 등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어 농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돌아오는 농촌, 매력있는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걸어야하는 가치는 '행복한 농업인'이다.

요즘 TV를 보면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건강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가 매우 많고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먹거리에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 영국 익스프레스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인간은 평생 약 35톤의 음식을 먹고 7만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평생 먹는 음식량을 보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즐거움이요 건강한 삶의 바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근원은 일부 수입산을 제외하면 신선농산물이던 가공품이던 대부분 그 출처가 우리 농촌이요 농민인데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우리 농민들의 삶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만약 국민들이 저가로 좋은 농산물을 잘 먹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힘들어 진다면 소비자 역시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 또한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기구 소득의 58%에 불과하고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처럼 흉년이 들면 수확량 때문에, 풍년이 들면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걱정해야 한다면 우리 농민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수급조절 시스템 및 경영안정 직불제 등 농가소득을 보다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농 구조, 농업인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 우대, 고령농 연금지급, 휴경보조금 확대 등 우리 농민을 행복하게 해줄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민이 안녕하고 진정 행복해질 때 우리농업이 생기를 찾을 수 있고, 농업이 생기를 찾아야 식량안보도, 농촌경관도, 소비자의 건강한 식탁도 유지되어 비로소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